

2016학년도 송실대학교 수시 신입학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정상계열)

출신고교		수험번호		성명	
------	--	------	--	----	--

※ 주의사항(문제 1-2번 공통)

- ①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답란과 해당문제가 일치해야함(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할 경우 '0'점 처리함)
- ②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을 달지 말 것.
- ③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 ④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할 것.
- ⑤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 ⑥ **검정색 필기구(연필, 볼펜, 사인펜 등)**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 할 것(그 이외 색필기구는 부정행위에 해당)

문제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읽고,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제시문 [다]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단, 글의 전개 과정에서 <그래프 1>, <그래프 2>, <표 1>을 모두 활용하시오.)

(1000±100자, 60점)

[가] 오늘날 정부의 소비자 보호기능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식료품의 신선도, 의약품과 화장품의 안전성 및 효과성 등과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질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정부에게 부여된 권력의 행사를 통해 민간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그 독점적 성질이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생산물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에 의한 권력의 행사가 민간기업 제도에서조차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비자의 권리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정부에 더욱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특정 산업이나 경제활동의 보호, 육성은 정부 규제의 목적 중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유치 산업과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또는 보조금 등의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혼합경제나 민간기업 경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정부가 규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왔다. 또한, 전력, 교통, 통신 등과 같은 기본필수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 이외에도, 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교역과 상거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사회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인위적인 독점을 도모하거나, 소수의 기업들이 담합을 피하거나, 과도한 경쟁 내지는 파괴적 경쟁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목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

[나] 정부가 민간의 활동에 개입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에 간섭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와 명분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공익의 보호와 촉진이다.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무질서와 혼란이 지배하는 야만적인 시장에서는 공익이 확보될 리 만무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항상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현상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득과 부의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다는 견해, 즉 시장 결과의 불공평성을 추가적인 시장 실패 요인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큰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 시각차는 시장과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각자의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이를 시장 실패 요인으로 간주하는 반면, 비록 소수이긴 하나 이를 시장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에 투철한 경제학자들도 있다. 그렇다고 후자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득과 부의 분배를 결코 공평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대다수의 경제학자들과 크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시장 결과가 불공평하다면 이는 시장 밖에서 명시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지, 시장규칙과 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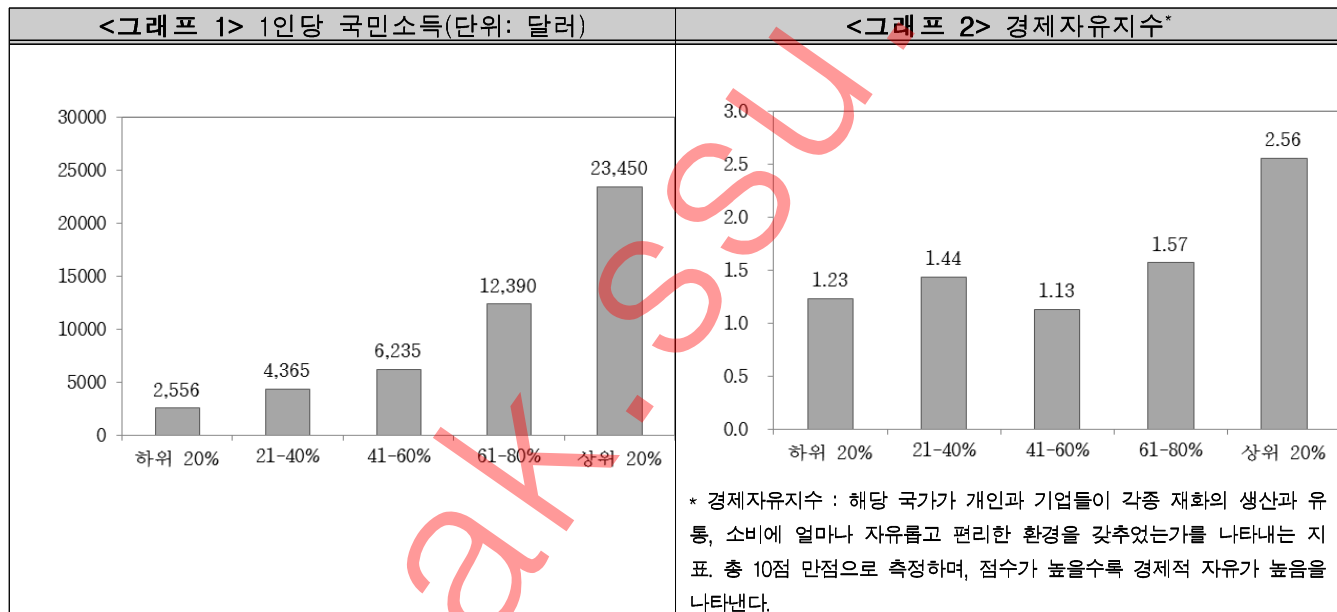
<뒷면에 계속>

일반적으로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나 시장 결과의 실현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은,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그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가 내린 판단의 기초와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특정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산업이 유망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누구나 그 산업이 그렇다고 믿고, 알고 있다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특별하게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 산업은 시장에서 우대와 환영을 받아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항상 좀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에 최소한 자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를 맞았다.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휴업 조례에 반발한 대형마트 측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잇달아 승소하면서 의무 휴업 조치가 유야무야 되자 서울시가 '판매 품목제한'이란 새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 소주, 막걸리 등 특정 품목은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대형마트들의 반발이 거세자 서울시는 "논의 중인 안의 하나일 뿐 정해진 것은 없다"고 약간 발을 빼는 분위기이지만,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추가 규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소 상인들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풍조 속에서 상생의 길이 열렸다"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관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은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판매품목 제한 등 대형마트 추가 규제는 편의성이나 효율성의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A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마트의 등장은 도시 성장에 따른 유통혁명, 여성의 고용확대 등 사회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며 "대형마트 규제가 시장을 돕는 것도 아니면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있는 만큼 시대변화에 맞춰 도시행정도 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료: 자유기업센터 보도자료

<표 1> 대형 유통업체 의무 휴업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매출 및 고객 수 추이 (단위: 원, 명, %)

		대형마트 6월	대형마트 7월	증감
		(의무 휴업 적용 전)	(의무 휴업 적용 후)	
평균매출액	전통시장	10,075,000	11,275,000	11.9%
	대형마트	300,000,000	255,000,000	-15.0%
평균고객수	전통시장	913	1,015	11.2%
	대형마트	35,475	30,650	-13.6%

<다음면에 계속>

문제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읽고 [문제 2-1], [문제 2-2], [문제 2-3]에 대해 답하시오.(40점)

[가] 경제활동이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다.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제 주체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분배·소비를 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 생산한 것을 어떻게 나눌지, 가진 것을 어디에 소비할지에 대해 항상 의사결정을 해야만 한다. 이처럼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경제주체의 목표에 비해 그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며, 경제적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현대 사회의 중요한 경제주체 중 하나인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의 목표인 이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모든 경영활동은 자원의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의 생산능력은 생산설비의 처리능력이나 작업인력의 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에 제한이 있는 원재료의 영향도 받는다.

기업의 생산능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수요나 경쟁기업의 전략, 그리고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한 투자의사 결정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생산능력은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산능력에 대한 투자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며, 투자에 대한 자금의 회수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진다. 일시적으로 시장 수요가 늘거나 줄더라도 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즉시 생산설비를 늘리거나 추가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며, 생산능력을 늘리는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인적·물적 생산자원을 확보하고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설비용량, 노동력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의 양 등을 단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최대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들 생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나] K 주식회사는 제품 X와 제품 Y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두 개의 연속적인 공정을 통하여 생산되며, 제품의 최대판매량은 제품 X는 1,000개, 제품 Y는 2,500개이다. 회사는 생산시설의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제1공정의 사용 가능한 기계시간은 4,500시간이고, 제2공정의 사용 가능한 기계시간은 7,500시간이다. 제품별 이익과 제품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각 공정의 기계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단위당 이익*	단위당 기계작업시간	
		제1공정	제2공정
제품 X	₩10	4시간	2시간
제품 Y	₩6	1시간	3시간

* 단위당 이익이란 제품 1개를 판매했을 때 얻는 이익을 의미하며, 본 문제에서는 생산된 제품은 모두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문제 2-1] 다음 (1), (2), (3)에 답하시오.

제품 X의 생산량을 x , 제품 Y의 생산량을 y 라고 할 때,

- (1) 이 회사의 총 이익을 x, y 의 수식으로 표현하시오.
- (2) 각 공정의 기계시간을 x, y 의 부등식으로 표현하시오.
- (3) 각 제품의 최대판매량을 x, y 의 부등식으로 표현하시오.

[문제 2-2] 제시문 [나]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총이익이 최대가 되는 최적 제품생산량 조합(x, y)을 구하시오.

[문제 2-3] 최적 제품 생산량 수준에서 총이익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를 제시하시오.

<끝>